

도내 고용·건설투자 동반 증가

도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심리가 호전되면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16년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취업자 수는 66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만명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5.9%로 지난해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건설투자도 개선돼 1월 중 건축허

한은 강원본부도 경제동향 발표

각종 지표 개선돼 경기 회복 기대

가면적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7.8% 증가했으며 건설수주액도 77.2% 증가한 2,16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소폭 상승해 지역별로는 춘천, 원주 및 강릉이 각각 0.1%, 0.2%, 0.2%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했다. 반면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2,264호로 전월에 비해 388호 증가했다.

도내 금융기간 수신 및 여신잔액은 각각 전월 말 대비 7조2,908억원, 376억원이 증가했으며 수신은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으로 이관자금이 대규모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신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비은행기관의 일반대출 및 소액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한편 1월 말 강원지역 예금은행 예대율은 87.4%로 전월 98.7%보다 하락했다. 남궁현기자

‘스마트건설’ 도내업체 ‘그림의 떡’

대형건설사 ICT융복합 기술 접목 초기비용 커 영세업체 도입 못해 지역제한·분할발주 정책 급선무

건설업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건설’이 떠오르고 있지만 강원도 영세업체들은 엄두조차 내지못해 경쟁력이 더 약화되고 있다.

31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은 최근 대우건설과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ICT 융·복합을 적극 추진하며 시공 현장에서의 ‘스마트건설’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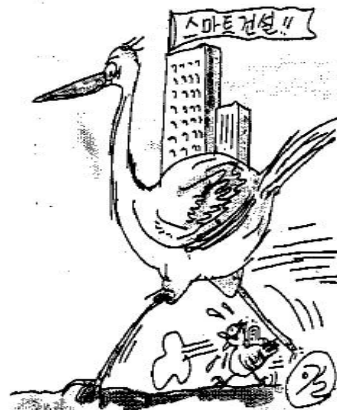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홈’과 ‘스마

트시티’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설업의 스마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마트건설’이란 빅데이터와 IoT를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현장의 안전·품질·공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건설’은 공사 단축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스마트건



없다.

문제는 정부가 기술제안입찰 등 ‘스마트건설’을 도입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과 분할발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 건설업계 한 대표는 “과거에 비해 건설업계에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며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공사의 분할 발주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설’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

614개 도내 건설사 대부분이 연 매출 50억원이 안 되는 영세업체들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스마트건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정부가 올해 불공정·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불공정 입찰조건 설정 등 '비정상' 관행 근절 본격화

정부, 올 정상화 추진 신규과제 확정

이번 추진계획은 정상화가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기존 과제 79개에 신규 과제 21개를 추가해 100대 핵심 과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신규 과제로 △공공 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척결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부패나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손실 철저 환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로 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을 정상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물품 제조와 설치가 혼합된 계약에 대한 발주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불법 하도급, 집단행동 등 건설현장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들도 정상화 대상이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핵심 단속태마로 선정하고 경찰청의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재정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공사 단가 상승, 공정한 거래관계 훼손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 곳곳에 난립한 전선, 통신선 등 공중 케이블도 비정상의 정상화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늘어진 케이블, 장마철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사선 등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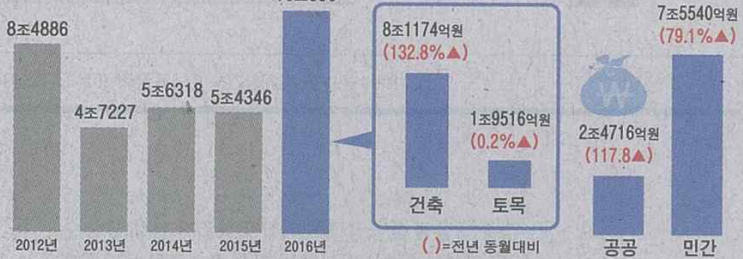
부패·비리로 발생하는 국고손실 환수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은 소관 검찰청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응이 미흡하고 형사판결 확정 때까지 환수소송 제기를 보류하는 관행에 따라 소멸 시효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채널을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으로 일원화하고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핵심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연도별 2월 건설수주 단위: 억원 (경상)



2월 국내 수주 '10兆' 월간기준 역대 최대

지난 2월 건설수주가 10조원을 돌파하며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작년 말 발주기관들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밀어내기식으로 발주한 데다 일회성 대형공사 수주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수주(경상)는 10조69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5.3%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일반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인 1~2월을 지나 3월로 접어들면서 늘어나

는 추세를 보이는데 올 2월에는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과거 2월 건설수주를 보면 지난 2012년 8조4886억원을 기록하고서 2013년에는 4조7227억원으로 급감했고 2014년(5조6318억원)과 2015년(5조4346억원)에도 각각 5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올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섰다.

2월 기준으로 건설수주가 10조원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 2월 건설수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종별로는 건축·토목 부문, 발주자별로는 공공·민간부문이 일제히 증가한 영향이 컸다.

건축부문 수주는 8조1174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4868억원) 132.8% 늘어났고, 토목부문은 1조9516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9478억원) 대비 0.2% 증가했다.

공공부문(2조4716억원)과 민간부문(7조5540억원)도 전년 동월(1조1349억원·4

조2184억원)에 비해 각각 117.8·79.1% 급증하며 건설수주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 2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말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일회성 대형공사 수주, 재정 조기집행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에는 20건이 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들이 대거 발주됐고 올 2월 일부 공사들이 낙찰자 결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기 고양 한류월드와 부산항 신항 관련 대형공사들이 수주 실적으로 잡혔고

정부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도 건설수주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과 도로·교량, 토지조성 등 토목에서 건설수주가 늘었다"며 "일회성 공사 수주 등 일상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건설수주의 '상고하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완료에 따라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투자 여력이 축소될 게 불보듯 뻔하고 오는 5월부터 대출 규제가 지방까지 확대 시행되면 주택경기도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건설수주가 크게 늘었지만 수주 흐름을 바꿀 만한 '터닝포인트'라기보다는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며 "오히려 반사효과로 3월부터 건설수주 증가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